

# 與 지지자 간 육탄전까지... 극한 대립 속 '심리적 분당' 우려

합동연설회 중 물리적 충돌 발생  
韓 “모 후보 지지자, 연설 방해 폭력  
민주주의 허용 이견 범위 아냐”

元 “韓, 허위사실 무차별 유포  
선관위, 즉각 수사 의뢰 촉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진 데다가 지지자 사이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당 대표 선거 이후에도 깊은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지난 15일 한동훈 후보의 연설 중 지지자 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한동훈 후보는 관중석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자 연설을 중단하고 질서를 갖춰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다.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당 대표 후보 측도 한 마디씩 보탰다. 한동훈 후보 측은 정광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한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모 후보 지지자가 사전 계획 아래 한 후보의 연설방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자인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참석자들 일부가 연설중인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며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자 경호원과 당직자들이 제지하고 있다. /뉴시스

다”며 “한 후보는 이견을 존중하고, 앞으로라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런 사전 기획된 정치 폭력은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이견의 범위가 아니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원희룡 후보 측은 미디어본부 공보단 입장문을 통해 “특히 한 후보와 동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자는 상대 후보 지지자를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선관위는 사실상 수 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한동훈 후보 측은 원희룡 후보 측의 책임인 양 허위사실까지 무차별 유포하고 있다”면서 “원 후보는 어떤 형태의 폭력에도 반대하며, 당 선관위는 즉각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

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우리 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급기야 물리적 충돌마저 벌어지고 말았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원희룡 후보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 마타도어, 구태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면서 “제가 보기에 지금 한동훈 캠프 수석 응원단장이 바로 원 후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한 후보는 채상병 사건 특검 도입과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 등으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고 원희룡 후보 역시 공약과 비전보다 한 후보에 대해 의혹 제기에도 몰입하며 상호 비방과 난타전을 조태했다”며 “괴멸적 총선 참패를 성찰하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전당대회가 더 이상 과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선당후사는 실종되고 분열과 충돌로 얼룩진 국민의힘을 지켜보며 국민과 당원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낮에 벌어진 폭력 사태에 당 대표 선거 이후 당이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원들과 국민들을 대신해 당대표 후보들께 엄중하게 말씀드린다”며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극한 대립 속에서 누가 대표가 돼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가 난과 상황인데 선장이 된들 미래를 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나”라며 “전당대회가 이렇게 공멸의 길로 간다면 승리자 또한 절반은 패배자다. 후보자들에게 자중자애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공식 행사 중 발생한 폭력 사건에 당 안팎이 시끄러워지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고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모든 후보 캠프에 지지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 관리를 요청하는 ‘합동연설회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韓-美,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 주요 정치 현안 대해선 언급 없어

국무회의서 나토 순방 성과 알려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강조  
장마전선 북상에 재난 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미국 순방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참석 성과와 호우 피해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순방 당시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은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민 방문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NCG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NCG 출범 1년 만에 미 핵자산을 한반도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 측 참여를 제도화하는 지침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미 기간 정국을 달군 국회 대통령 탄핵청문회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순방 성과 등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된 데 대해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

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인도태평양 파트너국)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주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것과 관련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집중호우 대응 지시를 수 차례 내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역사왜곡 논란 사과

논문 표절 의혹 대해선 부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사진)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12 군사쿠데타 왜곡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연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긴 결과, 표절률이 낮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91년 2월에 김 모 씨가 발간한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자료를 띄워놓고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후보자 논문이 있는데,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저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베낀 것이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93년 5월) 그 당시 정부청와대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



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라며 ‘12·12는 군사 쿠데타적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한 바 있다”

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2월에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사’란 표현을 쓴 것은 역사관을 의심하기에 부적절한 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수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민수 후보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논문 표절률 4%를 밝힌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물음에 “제가 듣기론 10% 이내면 양호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

## 노란봉투법,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통과

與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경영계에서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형동·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일방적인 심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야당은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박태홍 기자